

계동걸린 광주 문화수도

예산처 특별회계 불가
문광부 건립일정 연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머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기획예산처
는 특별법 내의 특별회계 설치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문화관광부도 아
시아 문화 전당을 2010년 이후 단계적
으로 건립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 조정
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대폭 축소
되거나 추후 사업 진행에 상당한 어려
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난항 겪는 특별회계=우선 특별회
계 설치 문제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 정
책상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통합 관
리하는 추세인데다 아시아문화중심도
시 특별법 내의 특별회계는 세입이 현
실상 전무한 상황이라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참여정부 공약사업

특별법 통과 앞서

'마스터플랜' 제시해야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특별법 내 특별
회계 설치를 고수한다면 국회 법사위
에서 시비 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9
월 국회에서도 특별법이 통과하지 못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특별법 통과를 위
해 특별회계 설치에 추후에 논의하
는 것이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도 지난 22
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100%를 다 만
족할 수 없는 만큼 특별회계 10%는
덜고 특별법 통과라는 90%의 이득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해 광주시와 광주지역 여당
의원들은 당장 세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회계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 즉 특별법 내 특별회계가
설치된다면 추후 정권 교체 등 정치적
상황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
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만약 특별법 내 특별회계가 설치
되지 않는다면 특별법이 통과되더라
도 차기 정권에서 문화중심도시 조성
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
능성이 크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 차원에서 기획
예산처에 특별회계 설치 반대 입장을
거둬 줄 것을 주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중심도시 조성은 참여정
부의 공약이므로 추후 성공적인 사업
진행의 토대를 참여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특별회
계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특별
법 내의 특별회계 설치가 무산된다면
이는 곧 안고 있는 진쟁이 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문광부 사업 축소하나=문화관광
부의 사업 추진 의지도 논란이 되고 있
다. 문광부는 지난 22일 당정협의회를 위
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아시아 문화전
당 건립 일정을 2010년 이후로 조정하
고 국가와 지방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
히 하는 한편 사업 규모에 맞게 추진체
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에
서는 문광부가 아시아 문화 전당 건립
과 운송에만 국고를 투입하고 문화기
반 시설 조성 등은 광주시가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
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문광부의 방침
이 실현된다면 재정력이 취약한 광주
시의 현실에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반 토막 날 가능성이 높
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가 진정한 아시아 문
화중심 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참여
정부 차원에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해
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광
주시와 광주지역 국회의원, 문화중심
도시 추진 기화단이 보다 굳건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
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문화중심도
시 조성 사업은 아직 최종 국고지원
규모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별법 통과에 앞서 정부에서는 광
주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마
스터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
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무부지사 역할·별정직 증원 이견

전남도의회, 道 조직개편안 왜 무산 시켰나

민선4기 인사·역점사업 등 차질 우려

전남도가 민선 4기를 맞아 의욕적으로 추
진해 온 조직개편이 도의회의 반발에 부딪
쳐 사실상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
아지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안 처리 무산으
로 전남도는 대규모 후속 인사는 물론, '행
복마을' 등 역점 시책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개편안에 대한 이견도 커
도 및 도의회간 긴장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운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25
일 "집행부측이 제출한 '전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불합리한 부
분과 문제점이 상당수 있어 26일 폐회하는
이번 회기에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
혔다.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전남도와 도의회간
논란의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직개편
안의 문제점으로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
포괄적 규정, 경제과학환경국의 비대화, 별
정직 공무원 증원, 행복마을과의 사업취지
와 기구개편 문제 등을 지적했다.

우선 전남도는 개정안에서 제5조에 규정
된 정무부지사의 역할과 관련 기존에 규정

됐 있던 7개 항목을 모두 삭제했다. 삭제된 7
개 항목은 ▲도지사 대리 정무적 행사 및 회의
참석 ▲의회와 관련된 정무적 업무 협조 ▲
정부·국회와 관련된 업무 협조 ▲정당·사
회단체 등과 협조 사항 ▲도정 홍보 및 언론
기관과의 협조 ▲도정 자문 및 여론수렴 ▲
기타 도지사 정무적 보좌에 필요한 사항 등
이다.

도는 이들 세부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지
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로 ▲도지사를
보좌해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 ▲도
지사가 지칭하는 정무적 업무의 수행 등 2
개 조항만을 집어 넣었다.

이에 대해 도의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무부지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란이
폭발되고 있다. 의회측은 "이같은 개정안은
대의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모든 조직이 수평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
지사의 절대권력화를 위한 수직적 경향이

강을 밝힌 바 있다. 도의회 역시 사업 취지
와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양수 전남도 행정혁신국장
은 "낙후된 전남도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과학환경국이나 행복마을과 신설이 검
토됐다"며 "조직개편 조례안 처리가 늦어
지면 후속인사나 도정현안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공무원 정원을 20명 줄이면서 별정직은 3
명 증원하려는데 대해서도 도의회는 "논공
행상적 위인실관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원들은 특히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의회와 사전 조율을 갖지 않은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맞서 향후
조직개편 조례안 심의 의결을 위한 의사일
정을 잡는데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
남도는 곧바로 8월 초 임시회를 열어 조
직개편 관련 조례안을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하
고 있지만, 도의회는 집행부측이 수정안을
내용을 경우 8월 임시회 개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서 또 한 차례 논란이 예고
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서울 성북을 등 4곳의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25일 서울 성북구 월곡제1동 제3투표구 투표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스

조순형 승리면 정계개편 점화

7·26 재보선과 정국 전망

오늘 치러지는 7·26 재보선 결과에 따른 정국
변화에 각 정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의석수가 숫자상으로 미미해 여야
의외 구도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여부적이다. 하
지만 내년에 있을 대선정국과 각 당 내부의 역할
구도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것이기에 많은 관심
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성북을의 선거 결과는 정치권의 새판짜기
의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많다.
우선 한나라당이 네 곳을 모두 '싸움'하는 경
우다. 이는 가장 가능성 있는 유력한 경우의 수로
접쳐지며 지난 5.31 지방선거의 민심을 다시 확인
하는 셈이어서 정국에 미칠 영향을 극히 작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측에서는 "이대로
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돼 우당 내부의
결속을 다질 수 있는 호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
지 않다.

반면 '선거 전파'에 따른 김근태 체제에 대한 회
의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으며 민주당과의 통합
론 등도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강재섭 대표체제가 '수해골프
파문'이라는 악재를 딛고 선전함으로써 당내의 지
배력을 공고히 하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
주당은 '호남지역당'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
는데 실패하게 돼 정계개편을 끌어갈 힘이 현저히

약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성북을 지역에서 민주당 혹은 열린우리당이 승
리할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오차범위 내
에서 팽팽하게 맞선 민주당 조순형 후보가 승리하는
경우 정치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
다. 조 후보의 승리는 단순히 국회의원 한 석을 얻
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즉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결국
정당간 것으로 관망됨으로써 민주당은 '반(反)노,
비(非)한나라' 세력을 응집시키는 구심점으로 자
라매김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정계 개
편에서 민주당은 가장 동력을 갖게 되는 셈이 되
기 때문이다. 반대로 전승의 분위기를 지키지 못
한 한나라당에서는 적지 않은 충격과 함께 수세
국면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재·보선 '불패신화'
가 깨지는 것은 물론 한나라당이 리더십을 관 자
체가 크게 뒤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당 내부적으로는 강재섭 대표 체제가 리
더십 위기에 내몰릴 공산이 크고, 박근혜 전 대표
와 이명박 서울시장 등 차기 주자군을 중심으로
한 당내 파워게임이 한층 가열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당으로서는 여당의 전통적 강세지역인 성
북을 지역을 민주당에 내줌으로써 정치적 '내상'
을 크게 입을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리더십 논란
에 휩싸인 김근태 체제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the '2006 Lotus Festival' (2006 연꽃축제). The main headline is '복합백련대축제' (Complex White Lotus Festival). The background features a large white lotus flower in the foreground and a scenic view of a lotus pond with many white lotus flowers in the background.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list of activities and information about the festival, including dates (August 11-15, 2006) and location (Ulsanjin, Gwangju). The text is in Korean and includes details about the festival's theme and activities.